

국정원 국조 '베격'... 실시계획서 채택 무산

與 "김현·진선미 의원 교체" 요구...野 "불가" 맞서

협의 난항 속 증인·참고인 명단 등 세부사항 윤곽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시작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만나 국조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특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진실규명에 매진하겠다"며 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현직 의원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해놓고 국조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정

치공세를 펼치며 국조를 방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어떠한 구차한 조건도 달지 말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는 국조 몰타기·무력화 시도"라며 "전향적인 새누리당식 정치 과정 수법과 '방탄 국조' 의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국조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달 15일까지로 예정된 국

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돼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정리하는 한편 국조 진행 세부사항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 의원은 증인 후보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8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13명을 증인·참고인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증인 후보로 거명하면서 "원 전 원장으로 부터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조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증인

NLL 대화록 공개안 가결

운영위, 오늘 열람의원 10명 선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넘겨받아 열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는 전날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합의사항대로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각 5명씩 10명이 관련 기록을 열람한 후 양당 간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보고사항 외 내용은 언론을 포함한 일반에 발표하지 않는 '간접 공개' 방식을 택했다.

열람 장소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정했으며, 기록물 회수를 포함한 보안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까지 열람할 의원

을 선정하고, 12일께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준비한 자료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기록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NLL',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7개를 제시했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기록을 열람할 여야 의원들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번 열람 통해 남북회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아니라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11일까지 열람할 의원

NLL '판도라 상자' 누가 볼까

새누리 정문헌·황진하·심윤조 의원

민주당 홍익표·김현·전해철 의원 거론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열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대 상 의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5명씩 뽑아 열람하기로 합의한 상태며 상임위원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당의 재량에 따라 사·보임을 통해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 인사 선정 전략과 관련,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논거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를 반박할 참여정부 정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와 열람 작업을 병행할 경우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은 국조 대상

이 아니라며 선 국기에 나선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NLL 대화록' 파문과 국정원 국조를 때어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운영위 중심으로 짜되, 국조 특위 의원들을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운영 위 소속의 정문헌 의원,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의원, 외교관 출신의 심윤조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 가운데서도 외교통일위 소속의 홍익표 원내대변인과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의 김현·전해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전 의원은 국조특위 소속이기도 하다. 이밖에 국조 특위 소속으로, 여권의 NLL대화록 사전입수설을 폭로했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박병계 의원 등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라도 비하 댓글' 고발합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은 국회의원과 윤민호 광주시장 위원장 등은 10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등으로 왜곡하고, 전라도 비하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을 명예훼손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정원, 자체 TF팀 통해 개혁작업 착수

정치개입 소지 없애고 방첩·대테러 부분 강화 주요 골자

국가정보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개혁 방향과 관련, 방첩과 대테러 부분을 강화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두고 국도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 '국정원 개혁'을 놓고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더욱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

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

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국정원은 3·4·5급 직원들의 2·3·4급 승진인사 시 각 부서장(1급)들이 간부들과 협의해 3~5배수의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면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

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승진심사위를 구성해 인사안을 확정하는 '3심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 라인'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

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북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은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의 자체개혁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은 "맞는 방향"이면서 옹호한 데 비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선(先)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개혁의 실효성을 묻 제 삼았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p> <p>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p> <p>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p> <p>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p> <p>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p>	<p>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p> <p>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p> <p>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p>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p> <p>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p>지상 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